

## 6월민주항쟁 19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 6월민주항쟁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 주 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일 시 : 2006년 6월 29일 (목) 09:30 ~18:00
-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한국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의 기념

정 해 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 1. 머리말

1987년에 발생했던 6월민주항쟁은 2006년 올해 6월로서 벌써 19주년이 되었고 내년 2007년 6월이면 20주년이 된다. 거의 20년의 시간이 흐름 지금, 6월항쟁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그 연장성 상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던 4·19 이후 거의 반세기 이상이 흘렀고 6월항쟁 이후로도 거의 2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또한 6월항쟁의 민주화 이후에도 탈냉전의 도래, 이에 뒤이어 닥쳐왔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등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6월항쟁이 점차 과거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시점에서, 특히 6월항쟁 20주년을 1년여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20여 년 전의 6월항쟁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현재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있어 어떻게 남겨지고, 또 남겨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그것은 지난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유지하면서도 그 경험과 정신을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과거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것을 형식화시키고 박제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과거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 과거를 기억하여 이를 현재와 미래에 전달함으로써 그 기억을 보다 일상화시키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우리는 지금부터 적어도 내년 6월항쟁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6월항쟁과 이를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기념되어야 할 것인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관 또는 민주주의기념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과거 민주화운동과 그 정점으로 6월항쟁에 대한 기념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월항쟁 20주년을 1년 앞둔 지금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적어도 6월항쟁 20주년이 되는 내년 6월에는 이에 대한 어떤 합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 글은 이를 위한 논의의 출발로서 과거 민주화운동과 그 정점으로의 6월민주항쟁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출발과 그 전개 조건을 결정지은 한국 근현대 역사 속에서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즉 그것은 한국 근현대 역사 이행 속에서 시작되고 전개되었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시적 조망 속에서 특정한 시기에, 즉 1960년 4·19혁명으로부터 1987년 6월항쟁을 통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까지 전개되었던 민주화운동의 위상과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둘째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속에서, 특히 약 20여 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4·19혁명에서 6월항쟁에 이르는 이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민주화운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는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현재의 민주주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일도 필요하지만,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그 특유의 특징과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주화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이 어떻게 기념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이다. 사실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기념은 과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념이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와 연결시키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연결에 있어 과거의 민주주의가 현재와 미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겨지고 기념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한국 근현대 역사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위상

근대 이후 서구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전과 시민혁명에 힘입어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서구의 민주주의는 그 초기 부르주아지 주도로 전개되었고, 이후 그것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확대 및 그 정치적 진출과 더불어 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 양자의 타협 속에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서구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경로 이외에 독일과 일본과 같이 반동적 자본주의로 인해 파시즘적 경로를 밟은 나라도 없지 않으며,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농민혁명을 통해 국가사회주의의 경로를 밟은 나라도 없지 않다.<sup>1)</sup>

그러나 베링턴 무어가 언급했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의 경로 이외에 이들과는 다른 근현대 역사 이행의 다른 경로는 없었던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 경로 이외에도 근현대 역사 이행의 제3세계적 경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근대 이행에 뒤늦은 제3세계의 대부분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시민혁명의 근대적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가운데 제국주의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독립 후에도 그들은 뒤늦게 근대적 국가형성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등의 근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그것 역시 독립 후 강하게 구축된 권위주의체제 속에서 시도되어야 했다.<sup>2)</sup>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거쳐 그 독립 후 권위주의체제의 지배 속에서 민주화를 추구했던 제3세계적 경로를 위의 세 경로 이외에 제4의 근현대 역사 이행의 경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근현대 역사 이행 역시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밟아왔던 이 같은 제4의 경로를 밟았다. 즉 한국은 그 스스로 근대 이행의 자생적인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가운데 제국주의의 열강의 침탈 속에서 결국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권위주의체제의 경험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 후 국제적 냉전과 더불어 전개되었던 남북 분단과 전쟁이 미친 영향은 현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적 과제, 즉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에 따른 국가건설의 과제, 산업화의 과

1) 이와 관련하여 베링턴 무어(Barrington Moore)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거시적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이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경로, 파시즘의 경로, 그리고 농민혁명을 통한 공산주의의 경로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베링턴 무어, 진덕규 옮김,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까치, 1985.

2) 물론 식민지배로부터의 독립 후 혁명적 민족주의에 바탕하여 국가사회주의의 경로를 밟은 나라들도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나라로서 북한을 꼽을 수 있다.

제, 그리고 민주화의 과제 등은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추구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국 민주화운동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같은 근현대 역사 이행의 환경이 한국 민주주의, 특히 그 출발에 미친 영향이다. 우선 한국이 자생적인 근대 이행에 실패하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한국의 일제 식민지화가 19세기 말 발생했던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협회의 활동 등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맹아가 될 싹을 없애버렸다는 점이다. 둘째는 군국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일제의 식민통치는 그 기간 동안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어떠한 여지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sup>3)</sup> 셋째는 일제의 식민기간 동안 강력하게 구축되었던 식민지 국가는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강한 국가주의의 전통을 남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민주주의 경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 식민지배의 강한 국가주의적 유산뿐만 아니라, 해방 후 분단과 전쟁 과정에서 강화되었던 냉전 반공주의에 의해 이제 갓 출범한 민주주의는 왜곡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에 의해 제도와 형식으로 위로부터 주어졌던 한국 민주주의는 그 출발과 더불어 변형되었다. 이승만정권의 반공 권위주의체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박정희 정권 시기 압축적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 권위주의체제로 이어졌고, 나아가 그것은 신군부세력의 5공독재 체제로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가 뒤늦게 시작되었고 뒤늦게 시작된 그것조차 그 발전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바로 이 같은 척박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의 이 같은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빨리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 전화될 수 있었다. 즉 해방 후 위로부터 주어졌던 한국 민주주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1960년 4·19혁명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1960-70년대에 걸쳐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속에서, 나아가 1980년대에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통해 등장한 5공 독재에 대한 격렬한 저항 속에서 전개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1987년 민주화 요구의 범국민적 항쟁인 6월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 민주화운동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권위주의체제의 퇴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마침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작되고 발전하기 어려웠던 이상과 같은 한국 근현대 역사 이행의 상황

3) 물론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 운동에 공화제의 채택 등 민주주의적 요소가 도입되기도 했으나, 그것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일반 대중들의 민주주의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을 감안할 때, 한국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가진다.

우선 한국 근현대 역사 이행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과 그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던 척박한 역사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집단적 의지와 노력을 통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것은 역사적 맥락은 다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나 명예혁명 또는 18세기 프랑스의 대혁명에 비유될 수 있을지 모른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혁명이 인간의 집단적 의지와 노력을 통해 절대주의를 타파함으로써 근대적 민주주의의 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인간의 집단적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한국 근현대 이행 과정에서 오랫동안 구축되었던 비민주적 국가권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체제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수 없었던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킨 역사적 동력이었고,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6월항쟁은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므로 왜곡된 한국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정립시킨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적 계기였다.

### 3. 한국 민주주의 전개와 민주화운동의 특징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속에서 4·19혁명으로부터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특히 민주화 이후 20여년에 걸쳐 전개되었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비교하여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 전개를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1987년 6월항쟁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나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되고 오히려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그 이후는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라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의 기본적인 전제가 갖춰진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가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 1)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미국에 의해서였다. 즉 국제적 냉전의 전개 속에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세력과 대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자유진영의 상징적 장소였던 한국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제로부터 이어진 강력한 국가주의의 유산과,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의 과정을 통해 강화되었던 냉전반공주의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 외견상 민주주의의 제도와 형식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권위주의의 실천으로 귀결되었던 이승만 반공독재가 바로 그 결과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제도와 형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권위주의의 실천이었던 것이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 이승만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었고, 그런 가운데 1950년대 후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도시의 중산층 등 국민의 계몽된 부분을 중심으로 상당 정도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승만정권의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1960년 4·19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는 4·19혁명의 발생을 사회계급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쉽지 않다. 일제 식민기간 동안 누적되었고 해방 후 분출되었던 한국사회의 민족적·계급적 갈등이 분단과 전쟁을 통해 반공세력의 최종적 승리로 끝난 조건에서 당시에 4·19혁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집단적 세력으로서의 사회계급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계급구조가 일단 붕괴된 공백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먼저 접하고 그 의식을 수용할 수 있었던 국민의 계몽된 부분에 의해 주도되었던 민주혁명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4·19혁명은 5·16쿠데타에 의해 이내 붕괴했다. 시민사회의 혁명적 동력이나 장면민주당 정권의 정국운영 능력이 과대 성장된 국가 억압기구, 특히 그중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갖춘 군부세력의 쿠데타 시도를 통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튼, 4·19혁명은 위로부터 제도와 형식으로만 주어졌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운동의 민주주의로 전환시킨 중대한 계기였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게 되었다. 즉 이후 민주화운동은 1960-70년대의 박정희 정권 기간 동안 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 3선 개헌 반대투쟁, 그리고 유신독재 반대투쟁 등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에 들어 전두환 5공 독재에 대한 저항을 통해 성장하고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19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권

4)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던 이 같은 현실에서 도입된 당시의 민주주의에 대해 최장집은 '조숙한 민주주의'(prematre democracy)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정치적 혼란은 내란에 가까운 정도로 극심하고, 정치적 대표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폭은 매우 협애하고, 자본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숙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21쪽.

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항쟁으로의 발전을 가져왔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운동이 대규모 대중 참여의 항쟁으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권위주의체제의 억압을 넘어섰을 때,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는 가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경제성장의 실적과 안보위기의 위협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강화해왔던 독재정권이 장기집권과 인권탄압 등으로 점차 그 정당성을 상실해갔기 때문이다. 특히 1979-80년 '서울의 봄' 시기 신군부세력의 쿠데타와 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적 진압은 초기부터 5공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했다. 다른 하나는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통해 성장해왔던 민주화운동이 역설적으로 광주의 패배의 경험 속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학생과 재야세력 중심의 민주화운동은 결국 민주야당과 사회운동까지 포괄하는 최대 민주화연합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연대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및 4·13호헌초치 등 일련의 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대중 참여의 6월민주항쟁의 분출로 이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한국 민주주의 전개가 위와 같이 전개되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와 관련,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는 데에 다음과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민주화의 효과로서 국가권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자율화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정치사회의 차원에서는 민주적인 선거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민간정부 구성이 가능해졌고, 비록 지역주의적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경쟁적인 정당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는 그것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율화됨으로써 보다 분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또 하나의 변화는 민주화 이후 도래했던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등의 영향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던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87년 민주화 이후 과거 권위주의체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체제가 들어섰는데, 그것은 과거 독재세력의 후계세력인 보수세력과 민주야당 중심의 민주세력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경쟁체제이자 타협체제였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과 타협을 지탱시켜준 정치적 기반은 지역주의였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비지역주의적 정치세력의 진입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물론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의 제도정치권 진입이 뒤늦게 이루어졌다—주로 보수세력과 민주세력만이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민주진영은 민주개혁을 추진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보수세력은 그 개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전개되었던 상황은 민주개혁을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민주세력간의 갈등이 이



루어지고 이로 인해 자주 정치적 교착상태가 발생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과 교착상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몇 번에 걸친 정권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다. 즉 노태우정부의 시기에는 ‘의사(疑似)민주화’의 개혁이,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문민화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탈냉전의 영향 속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햇볕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반공주의의 헤게모니는 상당 정도 약화되었고,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반부패 및 탈권위주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보수세력과 민주세력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나름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주의정치와 이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정당정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상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무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 1997년 IMF위기 이후 본격화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는 한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것은 시장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자본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것은 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의 논리를 사회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한국사회의 효율성 증대와 한국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제각각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하게 만듦으로써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한편 경제적 개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그리고 각 부문에 있어 급속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급속한 변모를 겪고 있으며, 이 같은 변모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공동체 해체의 위기와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주화 이후 전개된 한국 민주주의는 문민화, 햇볕정책, 반부패, 탈권위주의 등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 강화에 의해 급속한 양극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여, 일반 대중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의 대안을 조직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 같은 실패가 한국의 보수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권 장악에까지 이른 민주세력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민주세력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2)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 전개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을 기준으로 그 전 시기는 주로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그 이후의 시기는 민주화와 탈냉전 및 세계화 등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 후자의 민주주의가 전자의 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후자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상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자의 민주주의와 일정한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자의 민주주의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후자의 민주주의에 비해 전자의 민주주의, 즉 민주화운동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전개된 민주주의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민주화가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의미하듯, 민주화 한국 이후의 민주주의는 상당 정도 제도화되었다. 우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전개에 있어 1987년 개정헌법에 의한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지역주의에 기반 한 것이지만 정당정치의 역할과 비중이 보다 강화되었다. 물론 민주화운동에 뒤이은 사회운동 역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역할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에 비해 상당 정도 축소되었다.

둘째는 민주화 이후 변화된 상황에 의해 민주주의의 추구 내용 역시 상당 정도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민주화와 탈냉전은 민주주의 확대에 유리한 공간을 제공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국가와 정치의 차원을 넘어 사회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또한 중앙정치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외연이 인권과 평화 등으로까지 이어지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내용 변화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근래에 급속히 확대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급속히 약화시켰고 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의 심화와 사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을 증대시켰다. 또한 그것은 사회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공공성 확대, 그리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강화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민주주의가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면, 이에 비해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은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란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화를 원하는 자발적인 인간 집단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그 노력에 의해 추구되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권위주의체제의 탄압에 대항하여 전개되는 저항운동이라는 점에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이 같은 민주화운동에는 그 운동을 가능케 해준 주체들의 역할과 그들의 결집시켜주

는 정신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운동의 주체들은 누구이고 그들을 결집시켜 주었던 정신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나는 앞에서 4·19혁명이 과거의 계급구조가 일단 붕괴된 속에서 민주주의 내용을 먼저 접하고 그 의식을 수용할 수 있었던 국민의 계몽된 부분에 의해 주도되었던 민주혁명이라 언급했다. 4·19혁명의 주체가 대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4·19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이 같은 주체들의 구성이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후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학생운동과 재야세력은 4·19때보다 확대되고 조직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4·19혁명 주체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장과정에서 그 외연에 민주야당과 노동운동을 위시한 사회운동이 결합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학생운동과 재야세력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주체는 특정한 계급세력이라기보다는, 민주화를 요구했던 우리 사회의 보다 지적이고 계몽된 선진 집단들이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이 점차 확대되고 강화되어가면서 그것은 민주화운동이라는 하나의 블록을 구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주체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정신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의식이나 시대정신 등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의식이었고, 그러한 의식에서 보았을 때 마땅히 존재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정의에 대한 도덕적 의무 같은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현실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지향은 매우 포괄적이고 이상적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지향인 자주·민주·통일이나 민주·민중·민족과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개인들의 사적 이익에 바탕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넘어 오랜 기간에 걸쳐 끝없는 노력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은 민주화운동이 바탕하고 있는 바로 이 같은 정신적 요소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총체적 인간’ (total citizen)<sup>5)</sup>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화운동 주체들, 특히 학생운동의 경우 이 같은 정신적 기반은 1980년 광주 이후 사회과학적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한국적 급진주의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선 광주항쟁에 대한 신군부세력의 유혈적인 진압과 이로 인한 광주시민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군부세력의 야만성과 비인간성에 대해 분노하게 만들었고, 희생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죄의식과 책임감을 느끼게

5) 최장집은 다렌도르프(R. Dahrendorf)의 개념을 빌려, ‘총체적 인간’ (total citizen)을 “총체적 변혁을 추구하면서 이상사회를 구축하고자 사람의 모든 것을 투척하는, 자기희생적인 변혁에 복무하는 인간”으로 설명한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229쪽.

만들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격렬한 정서는 광주와 같은 사태를 낳은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변화의 갈구로 이어졌고, 바로 이 같은 갈구를 논리적으로 채워주었던 것이 바로 사회과학적 변혁이론이었다. 즉 광주 이후 민주화운동 주체들의 정신적 상황과 결합된 변혁이론적 사회과학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있어 급진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주된 흐름은, 특히 그것이 일반 대중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결합하게 되었을 때 보다 대중적인 방향을 지향했고 보다 온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4·19혁명 당시 그 참여자들이 규탄했던 것은 부정선거와 부정부패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은 압축적 산업화를 위해 일부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상황에 대한 것이거나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자주 침해되었던 인권유린에 대한 것이었다. 광주항쟁 당시 그 억압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광주시민들이 저항에 나섰던 것은 계엄군의 진압에 의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유린되는 데에 대한 반발에서였다. 또한 광주 이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내세웠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온건한 목표는 광범위한 대중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대중적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것은 공명선거,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호, 그리고 주권자로서 민주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의 확보 등, 민주주의 시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목표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인간적 의지와 행동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화운동에는 그러한 인간적 의지와 행동을 결집시키고 그것을 한데 묶어주었던 도덕적 일체감 같은 것이 있었다. 그 결과 민주화운동은 마침내 그것이 지향했던 이상적 목표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했던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운동의 민주주의는 제도의 민주주의에 의해 대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또한 민주화 이후 변화된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의 추구 내용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19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그것은 점차 과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모습과 가치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과거의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인간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었고, 사적 이익에 의해 분열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운, 공동체의 사회정의라 여겨졌던 것에 대한 자기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었다. 즉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그 시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미덕'<sup>6)</sup>을 보여주고 있었다.

#### 4. 6월민주항쟁 20주년, 민주화운동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그 정점으로서의 6월민주항쟁은 그 이후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과 가치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간은 흘러 6월항쟁은 이제 올해로써 19주년을 맞게 되고, 내년이면 20주년을 맞게 된다. 6월항쟁 이후 거의 20여년이 흐른 바로 이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문제를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민주화운동은 점차 과거가 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과거의 역사로서 일단 정리될 필요가 있고, 이에 바탕하여 기념의 형태로 현재와 미래의 한국 민주주의로 연결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과연 기념되어야 하는가 하는 전제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념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 근현대 역사 이행의 어려운 과정을 넘어 이제 한국사회의 발전 수준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한국사회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거쳐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국가건설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등의 근대적 과제들을 이미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정립의 전환적 계기가 되었던 6월항쟁 발생 이후 거의 한 세대에 이르는 20여년의 시간도 흘렀고,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또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은 일단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한 과정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6) 이와 관련하여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다루는 장의 제목을 '미덕 II'라 제목을 붙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운동을 미덕의 범주에 다시 묶는 것은---- 한국인들이 20세기에 들어 탈피했다고 믿는 도덕적 질서가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사회에서나 민주주의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나 정치체제가 아니라 단 한 발의 전진을 위해서도 싸워 쟁취해야 하는 것임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Bruce Cummings, 김동노 외 역,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제7장.

7)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발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은 그 말의 사전적 의미처럼 과거를 상기하여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이해되며, 계승과 발전은 과거를 이어받아 이를 현재와 미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나는 기념의 개념 역시 그 속에 계승과 발전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기념을 일단 과거를 상기하되, 그 기억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있어 그 과거를 보다 일상화하고 문화화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과거의 경험과 정신을 현재와 미래에 일상화하고 문화화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한 기념이 필요한 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개 속에서 한편으로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투쟁의 필요성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청산을 통한 국민통합과 화해의 필요성 때문이다. 즉 민주화 이후 상당 시간에 걸쳐 변화된 상황에서 자칫 과거의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은 쉽게 잊혀지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주의가 과거의 민주주의의 연장선 위에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새삼 기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같은 기억은 현재와 미래의 갈등과 분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통합과 화해로 승화될 필요가 있는 기억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의 과거청산작업은 그것을 위한 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은 기념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이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념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은 곧 그 경험과 정신이 일상화되고 문화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은 그 기념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남게 되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남는 그것은 알게 모르게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민주화운동의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이제 문화와 생활로서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공적인 결과는 동아시아를 위시한 제3세계 민주화운동의 선구적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경험과 정신은 기념을 통해 보다 국제적으로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이 기념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기념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차원에서 기념될 필요가 있다.

우선 6월민주항쟁 발생의 6월 10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한다. 6월항쟁이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전환기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6월항쟁 발생 일인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화운동 과정의 주요 사건이었던 4·19과 5·18이 이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는 만큼 민주화운동의 최고 정점에 있는 6·10을 이제야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뒤늦은 일이다.<sup>8)</sup> 나아가, 6월항쟁은 수십 년 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가져왔던 범국민적 민주항쟁으로서, 한국 근현대 역사에 있어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시킨 계기로서 그 역사적 의미는 일제 식민지배 시기의 전 민족적 독립운동이었던

8) 현재 국가기념일 제정은 대통령령인 '각종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3·1운동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경축할만한 역사적 의미를 지녔다. 그런 점에서 6·10에 대한 국경일 제정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sup>9)</sup>

다음으로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민주주의)기념관 건립으로 기념되어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단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 경험과 정신은 기념관 건립을 통해 기념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민주주의)기념관 건립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진영을 넘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sup>10)</sup> 한편 정부는 현재 미군기지 이전의 용산에 민족역사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 역사의 대미(大尾)를 장식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관<sup>11)</sup>은 바로 여기에 건립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민주화운동(민주주의)기념관 건립을 통해 민주화운동이 기념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이다. 과거 우리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험과 정신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민주화운동에 바탕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적 소통과 연대이다. 민주화운동에 바탕한 민주주의의 경험과 가치는 세대와 세대간에, 지역과 지역간에, 그리고 한국과 타 간에 소통되고, 이 같은 소통을 통해 그들 사이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연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문화이다. 즉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현재와 미래에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으로

9) 국경일 지정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10)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2004.7 참조.

11) 20세기 한국 근현대 역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제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독립운동은 독립기념관 건립을 통해 기념되고 있다. 또한 해방 후 분단의 상황에서 발생했던 한국전쟁은 전쟁기념관 건립을 통해 기념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가장 중요한 역사 발전인 민주화운동 일반과 6월항쟁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제하 독립운동이 독립기념관 건립을 통해, 그리고 한국전쟁이 전쟁기념관을 통해 기념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최대의 운동이었던 한국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 또한 민주화운동(민주주의)기념관 건립을 통해 기념될 필요가 있다.

이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육성과 민주주의의 일상화, 문화화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sup>12)</sup>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민주주의 시민축제로서 기념될 필요가 있다. 사실 과거 민주화운동은 오래기간에 걸친 매우 고통어린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민주주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발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 특히 그 과정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대중 참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희생이 적었던 6월항쟁은 추모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시민축제로서 다시 부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주주의 시민축제는 상업적으로 오염된 축제가 아니라, 적극적 시민으로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기념하고 기원하는 공공적 축제라 할 수 있다.

결국 민주화운동의 정점이었던 6월민주항쟁이 발생한 이후 20여년이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또한 근현대로의 진입 과정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20세기 역사를 정리하고 이에 바탕하여 21세기의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 한국 민주화운동은 새롭게 정리되고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과 6월항쟁에 대한 기념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월항쟁 20주년을 1년여 앞둔 지금, 우리는 이를 위해 범국민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여 6월항쟁 20주년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는 적어도 그 기념의 국민적 합의와 그 구체적 내용의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12)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앞의 책, 36-46쪽.